‘미니총선’ 재보선…수도권·PK 판세 관심 집중

與, 송영길 인천 연수갑 등 우세 판단

민주 “13곳 수성” 국힘 “최소 4곳 승리”

평택을 조국·김용남 오차범위 내 접전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의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호남에서는 고흥 출신으로 민주당·소나무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가 나선 인천 연수갑의 최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인천 연수갑의 경우 조원씨앤아이의 지난 9-10일 조사 결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48.7%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33.9%)를 10%p 넘게 앞서고 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과 함께 자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13곳을 사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재보선 판세에서도 현재 11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다.

선거구별로는 부산 북갑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39%)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29%)를 10%p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1%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내에서 한 후보를 밀돌았다.

또 경기 하남갑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7%를 얻어 국민의힘 이용 후보(33%)를 14%p 차로 따돌렸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는 여론조사꽃의 4-5일 조사 기준 민주당 김남준 후보가 58.7%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19.4%)를, 경기 안산갑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후보(47.1%)가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23.1%)를 각각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는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성군과 울산 남갑이다.

여야가 총출동한 경기 평택을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24%)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내에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20%다.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자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13곳 사수를,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 달성을 포함해 최소 4곳 이상에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관건이 되는 지역은 울산 남갑, 경기 하남갑 등이다.

울산 남갑의 경우 국민의힘으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의 지역구다. 김 후보는 계엄 사태 때 탈당해 당적을 바꿨으며 남갑 자체는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갑은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22대 총선 때 추 후보는 1천100여 표 차로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용 후보를 공천했으며 민주당은 지명도가 있는 이광재 전 의원을 후보로 투입한 상태다.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보수 후보 단일화가 난망한 상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진행됐다. 부산 북갑 조사는 18세 이상 주민 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기 하남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률은 1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선거구 거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9-10일 인천시 연수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여론조사꽃 인천 조사는 지난 4-5일 인천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여론조사꽃 안산 조사는 지난 4-5일 경기 안산시 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CATI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김진수 기자

金총리 “삼성전자 파업 시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 강구”

대국민담화 통해 노사 타협 압박

“피해 100조…경제 손실 상상 초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 시점 사흘 앞인 18일 재개되는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타협점 모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18일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을 두고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했고,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해 “개별 기업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의 이런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내일 ‘통합특별시 성공 콘퍼런스’

정준호 “입법·정책지원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사진)이 광주와 전남의 행정·경제 통합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미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정 의원은 17일 “19일 오후 1시30분 광주 북구 소재 ‘광주 스테이지(STA-G)’에서 ‘상생을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 성공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준호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정치·경제·행정 체제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남·광주의 미래와 민생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